

한반도 대전환 시대, 평화 만들기를 위한 종교의 역할*

이 재 봉**
원광대학교

【요약】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 한반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이 매우 크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가 불안과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2019년 현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에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과제는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종류의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대화조차 단절된 상황에서, 남한의 종교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자 역할과 남한과 북한 사이의 단절된 대화를 잇는 촉진자 역할에 앞장설 수 있다.

주제어: 한반도 대전환, 전쟁 종식, 평화 만들기, 종교의 역할, 중재자, 촉진자.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19.11.22.,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9년 원광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 원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pbpm@hanmail.net

I. 한반도 대전환과 불안정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 한반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이 매우 크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네 가지를 꼽아본다.

첫째, 1945년 들어선 73년짜리 한반도 분단체제가 무너지고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됐다.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945년부터 유지해온 한반도 분단 상태에서 벗어나 통일의 문턱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 제1단계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실질적’ 통일까지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둘째, 1948년부터 시작된 70년짜리 적대적 북미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두 나라가 1948년부터 지속해온 적대관계를 끝내고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셋째,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이 69년 만에 완전히 끝나게 됐다. 전쟁을 종결하고 “안정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싸우고 어정쩡하게 멈추거나(停戰) 쉬고 있는(休戰) 비정상에서 벗어나 65년 만에 종전(終戰) 선언과 평화협정을 불러오기로 했다.

넷째, 1993년 불거진 25년짜리 북핵문제가 풀리게 됐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로 합의함으로써, 1993년부터 한반도 안팎에서 갈등과 긴장을 불러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미국의 핵위협’과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가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지게 됐다.¹⁾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가 불안과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역시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짐으로써 남북관계 진전까지 가로막고 있다.

둘째, 남한과 북한 사이엔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미국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못해 북한과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남한 탓이 크다.

1) 문재인,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2017~2018) 하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2018), 423-426쪽; 문재인,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2018~2019) 상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2019), 321-323쪽;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2018.9.19.; 2018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018 평양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2018.9.20.

셋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비롯한 패권경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이고 중국은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기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쉽다.

넷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역사 해석과 영토 문제에서 무역과 군사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이 금세 그칠 것 같지 않다.

1. 미중 패권경쟁

위의 불안과 위기 가운데 핵심은 미중 패권경쟁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정책 때문에 한일갈등이 빚어지고, 북미관계가 교착되며,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것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45년간의 냉전시대 미국의 지상목표는 ‘반공’이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는 ‘봉쇄와 저지(containment and deterrence)’ 정책을 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미국의 제1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자리를 지키며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정책이다.

1) 중국의 급성장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하며 1980년 경제특구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1978-2018년 40년간 연평균 10%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G7’ 국가들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2010년까지 따라잡았다. 1993년 캐나다, 2000년 이탈리아, 2005년 프랑스, 2006년 영국, 2007년 독일, 2010년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을 시장환율(MER)이 아닌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하면 2014년 미국까지 추월하고 세계 제1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에 앞서 2009년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수출대국이 되고, 2012년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무역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국방비를 크게 늘려왔다. 200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연평균 12%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0년부터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군사강국들보다 두 배 이상의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미국에 맞서 해양 전력을 본격적으로 증강시키며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

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개입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세워놓았다. ‘접근반대 및 지역거부(反介入/區域拒止)’ 전략으로, 중국과 가까운 바다에서는 미국 함대의 접근을 막고, 조금 더 먼 바다에서는 미국 함대의 작전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2017년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는 ‘소강(小康) 사회’를 이루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모든 인민이 함께 부강해지는 ‘대동(大同) 사회’로 나아간다는 내용이다. 육로와 바닷길로 각각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야심차게 추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제1 국가가 되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겠다는 것이다.²⁾

2) 미국의 견제와 봉쇄

미국은 늦어도 1990년대 초부터 “새로운 경쟁국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대외정책 및 국방전략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해왔다. 특히 중국의 경쟁 국가인 일본을 활용해왔다.

1996년 일본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997년 일본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있는 ‘평화헌법’을 수정해 ‘정상국가’가 되도록 촉구하면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했다. 2015년엔 일본과의 방위협력지침을 다시 개정하고, 2016년엔 일본 안보법제를 개정하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협정과 2016년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이 맺어지고,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 남한 배치가 발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핵심 내용은 미국이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와 4각협력을 증진시켜” 중국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했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전략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며 압박하는 데는 경제적 배경이 크다. 중국에게 1년 평균 3,5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은 최근 5년간 일본에겐 연평균 700억 달러, 남한에겐 2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동맹국이라는 일본과 남한에도 압박을 가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협상하자고 했다.³⁾

2) 이재봉, 「미중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84호(한국동북아학회, 2017), 5-23쪽; 한광수, 『미중 패권전쟁은 없다』(서울: 한겨레출판, 2019).

3) 이재봉,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와 남한의 중립 외교」,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70호(한국동북아

2. 한일 갈등

한국전쟁으로 냉전이 심화하자 미국은 일본과 1951년 안보조약을 맺었다. 1941-45년 일본과 전쟁을 벌일 때는 소련과 연합했지만, 1947년부터 소련과 냉전을 치르면서는 일본과 손잡게 된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한국까지 끌어들이려 했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적대관계를 풀기 어려웠다. 미국이 1951년부터 한일협상을 주선하고 개입하며 압력을 행사했지만 이승만의 완고한 반일정책에 막혔다.

1)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점

이승만이 1960년 사월혁명으로 쫓겨나고 일본군 출신 박정희가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미국은 1962년부터 한일협정을 “미국정부의 최고 관심사” 또는 “가장 급선무”로 삼고 한국과 일본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한국은 협상에 적극 응했지만, 야당과 대학생들의 저항과 반발이 몹시 컸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65년 타결된 한일협정은 야당과 대학생들의 주장대로 몹시 “민족 반역적이고 굴욕적이며 졸속적”인 것이었다. 첫째, 일본이 35년간의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국에 유상과 무상채권을 포함해 모두 8억 달러를 건넸는데,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독립 축하’ 및 ‘경제 협력’ 명목이었다. 아직도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 적지 않은데, 당시 일본 정치인들이야 오죽했겠는가.

둘째, 독도 영유권, 징용자, 위안부, 원폭 피해자, 약탈 문화재 등에 관한 문제를 모두 덮어버렸다. 독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징용자와 위안부 문제 등이 최근 다시 불거지게 된 배경이다.⁴⁾

2) 2015-16년 한일 위안부 협정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한일협정이 맺어진 1965년 이후 50년이 흐른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위안부 협정을 맺었다. 일본이 10억 엔(약 100억 원)을 건네기로 했는데, 1965년 그랬던 것처럼 배상이나 보상 명목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명목이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위안부 문제를 마지막으로 되돌릴 수 없이 해결한다고 선언하고,

학회, 2014), 5-19쪽; 이재봉, 「미중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84호(한국동북아학회, 2017), 5-23쪽; 한광수, 앞의 책.

4) 이재봉, 「한일협정과 미국의 압력」,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54호(한국동북아학회, 2010), 119-133쪽.

앞으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이를 빌미로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자고 합의했다.

반세기가 흐른 뒤에 이렇게 또다시 “민족 반역적이고 굴욕적이며 졸속적”인 한일협정이 되풀이된 것은 여전히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2015년 일본과 방위협력지침을 다시 개정하고 2016년 일본 안보법제를 개정하도록 이끌며 미일동맹을 강화하자,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배경과 과정에서 미국은 다시 한국+미국+일본의 삼각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압력을 행사했다.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걸끄러운 문제를 털어버리고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적극 동참하라는 것이었다. 크게 세 가지가 추진되었다.

첫째, 앞에서 얘기한대로 201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위안부 협정이 맺어졌다. 둘째, 2016년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 배치를 발표했다. 겉으로는 북한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2016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흔히 ‘지소미아(GSOMIA)’라 불리는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정보가 자유롭게 교류되고 있어서 미국에 굳이 필요한 게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지도록 한 조치였다.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의결’이라는 ‘밀실 처리’에 따른 강력한 반발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 맺어진 데 이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협의가 재개되고 체결된 것이다. 이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⁵⁾

3) 일본의 경제보복 배경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2018년 위안부 협정을 사실상 파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도 2017년 대선공약에 포함된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아베 일본 총리가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

5) <미 정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특히 강조>, 《한국일보》, 2015.12.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12291685648427>; <폐기 문턱까지 갔던 지소미아...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 《연합뉴스》, 2015.12.29.,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70700504?input=1179m>.

통령과만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7월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아베가 도발하는 배경과 이유는 이것뿐만 아닐 것이다. 그의 불만과 분노 섞인 도발엔 남한에 대한 경계와 증오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추월당한 충격과 좌절, 남한에게도 추월당할지 모를 당혹감과 불안, 그리고 북한 및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소외당하는 불만과 초조함이 겹쳐져 있는 것 같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지위를 지켜오다 2010년 중국에 추월당했다. 2등자리를 중국에 내주고 3등으로 밀린 것이다. 일본은 1894-95년 한반도에서 중국과 전쟁을 벌여 물리친 데 이어 1931년부터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점령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짓밟히고 쪼개졌던 중국에 1949년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1964년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1971년엔 유엔에 가입해 대만을 밀어내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까지 되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형편없던 후진국이 1978년부터 개혁개방으로 무려 30-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평균 10%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2010년 국내총생산(GDP)과 무역 규모에서 일본을 앞질러버린 것이다. 일본은 중국이 급성장하면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중국 위협론’을 2000년대 초부터 제기하며 몸부림쳤지만 말이다. 핵무기도 갖지 못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꿈도 실현시키지 못해 군사력으로나 외교력으로 중국에 밀리던 일본이 경제력에서도 뒤지게 되면서 얼마나 크게 충격 받고 좌절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에도 쫓기는 상황이다. 1965년 한일수교 당시 한국경제는 일본의 1/30 또는 3% 수준이었지만, 50여 년이 흐른 2018년엔 1/3 또는 30% 수준이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90년까지 일본의 40% 이하였지만, 2015년엔 90%였다. 2020년엔 95%, 2025년엔 100%로 따라 잡으리라 예상된다. 과거엔 한국에서나 세계에서나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이 전자제품의 상징이었지만, 이젠 한국의 삼성과 LG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쫓기는 미국이 추월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듯, 식민통치까지 했던 일본이 따라잡으려는 한국을 경계하며 보복하는 것이라는 뜻이다.⁶⁾

이에 덧붙여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 대전환 시대에 남북한 및 주변 4강대국 중에서 일본만 소외되었다. 북한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정상회담이 열리면서金正은은 문재인과 3회, 트럼프와 3회, 시진핑과 4회, 푸틴과 1회 만났다. 그러나 아베와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아베의 요구에도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한반도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 대륙과 연결될 텐데 그게 실현되면 섬나라 일본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아베가

6)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 data; International Monetary Fund(<https://www.imf.org/external/index.htm>) data;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국제통계.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는 이유다.

3. 북미관계 교착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을 69년이 지나도록 끝내지 못하고, 1953년 들어선 정전협정을 66년이 흐르도록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데는 북미 적대관계 때문이다. 전쟁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1979년, 한국과 중국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했고, 남한과 북한은 1991년부터 다양한 협정과 정상회담 등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했다.

1) 북핵문제와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

미국이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거나 못하고 평화협정을 미루는 이유와 배경엔 이른바 ‘북핵 문제’ 보다 주한미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법적으로나 명목적으로는 북한의 남침을 막거나 물리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거나 봉쇄하는 데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침략하지 말자거나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적으로 지내자는 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미국의 중국 견제나 봉쇄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미국이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거나 봉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적대국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북한이 오래 전부터 군비 감축과 평화협정을 줄기차게 요구해도,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이 한사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경이다.

2) 트럼프와金正은의 공생전략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정체되어 왔지만, 머지않아金正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두 사람 서로의 필요성 때문이다.

트럼프가金正은과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다. 노벨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에 재선되는 것이다. 첫째, 트럼프는 2018년부터 노벨평화상을 받기 원했다. 얼마나 수상을 원하면 체면 사납게 아베 일본총리에게까지 자신을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겠는가. 2019년까지는 실패했다. 1950년 일어나고 1953년 중단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면 된다. 무려 70년 만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하며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무기 완전 폐기를 바꾸면 금상첨화다. 2020년 10월 수상자로 발표되면 11월 대통령 재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트럼프는 2020년 11월 대통령 재선을 원한다. 언제든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다. 먹고사는 문제가 후보 선택의 제1 결정요인이란 말이다. 2017년 1월 트럼프 집권 이후 2019년 11월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괜찮은 편이다. 그가 큰소리치는 대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선거에서 더 유리해지려면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경제업적에 안보성과를 덧붙여야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길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다. 안보성과를 가장 얻기 쉬운 곳이 한반도다. 앞에서 얘기했듯,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의 2016년 대선 공약이다. 주한미군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은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와 주류정치세력의 거센 저항과 반발이 있겠지만, 트럼프는 국방비 절감을 내세우며 밀어붙일 독심을 지니고 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정상화까지 이룬 터에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는 주장으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⁷⁾

참고로, 2019년 11월 현재 트럼프 탄핵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선 탄핵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겠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역시 트럼프와 협상을 통해 꼭 얻고자 하는 게 있다. 우선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북한은 2016년부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 연도 2020년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 게다가 2017년 9월 수소폭탄 시험 및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성공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18년 4월 ‘경제건설 총력집중’ 정책을 선언했다. 군사건설을 끝냈으니 경제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⁸⁾

7) “Trump’s Big 10 foreign policy pledges — will he keep them?,” *USA Today*, November 17, 2016: <https://www.usatoday.com/story/news/world/2016/11/17/trump-foreign-policy-campaign-promises/93802880/>; “Trump Orders Pentagon to Consider Reducing U.S. Forces in Sou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y 3, 2018, <https://www.nytimes.com/2018/05/03/world/asia/trump-troops-south-korea.html>,

8) <“화성-15형 시험발사 대성공... 국가핵무력건설 완수”>, 《통일뉴스》, 2017.11.3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48>; <김정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새 전략 노선 천명>, 《통일뉴스》, 2018.4.2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07>.

나아가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풀 수 없고,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한이든 중국이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나 협력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이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북한에 투자가 들어가고, 일본의 식민통치 보상이나 배상금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3) 트럼프와金正은의 협상전략

트럼프와金正은이 서로를 필요하면서도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양쪽의 협상전략 때문이다. 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기에 자신은 될수록 적게 주고 상대방부터 가능한 많이 받기를 원한다. 둘 다 협상의 귀재다. 트럼프는 회담을 취소하거나 뒤엎는 등 ‘미친놈’처럼 굴며 상대의 양보나 굴복을 받아내는 ‘미치광이 협상술(madman theory)’을 구사한다.金正은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며 양보나 굴복을 받아내는 ‘벼랑끝 협상술(brinkmanship)’을 펼친다. 서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상대방부터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 남북관계 후퇴와 악화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매우 뜻깊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종전’을 선언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치렀던 한국전쟁을 65년 동안 어정쩡하게 유지해온 정전 또는 휴전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끝내자고 약속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직접 연설한 것은 몹시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 “오늘金正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그림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⁹⁾

1년이 흐른 2019년 11월 현재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후퇴하

9) 문재인,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2018~2019) 상권(서울: 대통령비서실, 2019), 321-323쪽.

며 악화하고 있다. 첫째,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기로 했지만, 남한은 국방비를 크게 늘리며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수십 대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2월 이후 거의 매달 한두 번 미사일이나 대포를 쏘아 올렸다. 둘째, 남북 사이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하며,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추진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기로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운영하고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준비모임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넷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북한은 남한을 향해 조롱과 비난만 보내고 있다.

남북관계의 후퇴와 악화는 남한 탓이 크다. 남한은 북한이 2019년 미사일을 비롯한 새로운 무기 시험발사를 10여 차례나 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난하지만, 먼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쪽은 남한이다. 남한은 1990년대부터 적어도 20년 이상 최소한 10배 이상 북한보다 군사비를 더 많이 써왔으면서도 문제인 정부 들어서 더 크게 늘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첨단무기를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 해마다 미국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여온 가운데 2019년까지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사이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미국의 눈치만 볼 뿐이다. 미국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못해 북한과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적대시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군사비를 크게 늘리며 미국의 첨단 전투기를 많이 도입하는 것은 남한이 1970년대부터 추구해온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남한의 군비증강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북한의 군사비는 기껏해야 남한의 1/10 수준이고 많아야 미국의 1/100도 되지 않는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첨단무기를 들여오지도 못한다. 러시아나 중국과 단 한 번도 합동군사훈련을 벌이지 않는다. 남한의 군비증강과 한미군사훈련에 맞서 할 수 있는 대응이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 ‘도발’ 밖에 없지 않은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철도와 도로 연결은커녕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조차 하지 못하는 남한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조롱과 비난 그리고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맞물려 진전될 수밖에 없다. 남한은 북한과 미국의 70년 적대관계 사이에 끼어있기도 하다.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남한은 뒤따라가면 되지만, 정

체되면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북한과 평화공존 및 통일을 추구하며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려면 미국으로부터 동맹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기 마련이고,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공조’를 내세우면 북한으로부터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II.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교의 역할

앞에서 얘기했듯,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4월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열리고 2018 6월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금세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머지않아 통일이 이루어질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관계는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다 이와 맞물려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하며 악화하고 있다. 2019년 11월 현재 북한은 남한과 모든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국의 종교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마침 아래에서 소개하듯, 2019년 11월 북한 종교단체들이 남한 종교계를 향해 호소문을 발표한 터다.

1. 종교의 이중성: 전쟁과 비폭력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비폭력과 평화를 지향하고 추구한다. 경전에서 폭력과 전쟁을 부추기는 종교는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평화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추구하는 종교는 많지 않다. 많은 종교가 목표로서의 평화는 중시하면서도 과정으로서의 평화는 소홀히 해왔다.

인류 역사상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종교였다. 전쟁의 70-80%가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종교분쟁은 다른 분쟁보다 더 격렬한 충돌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성전(聖戰: holy war)’이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술하게 저질러졌는가. 주로 종교 간의 불화가 전쟁을 불러왔다.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성취한다는 명분으로 종교마저 전쟁을 용인하거나 선호해온 것이다.¹⁰⁾

10) 이케다 다이사쿠·요한 갈통 저, 손대준 역, 『평화를 위한 선택』(서울: 신영미디어, 1997), 제4장; 이재봉, 「글렌 D. 페이지의 비폭력 정치론」, 안청시 편, 『비살생정치학과 지구평화운동』(서울: 집문당, 2004), 114-115쪽; 이재봉, 「종교와 평화: 원불교의 비폭력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8집(원광

세계 4대종교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서양에서 일어나 200여개 국가에 퍼져있고, 힌두교와 불교는 동양에서 일어나 120개 안팎의 국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특히 호전적이다. 역사적으로 큰 전쟁은 대부분 이들 유일신 종교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서로 싸우고, 기독교 안에서는 천주교도와 개신교도가 같은 예수를 따르며 서로 다투고, 이슬람교 안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같은 알라를 섬기면서 원수처럼 서로 죽이기도 한다. 이들은 다른 종교나 교파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과 편협성을 보이며 다른 교도들을 개종시키려고 하거나 죽여 없애려고까지 하지 않은가. 모든 종교와 교파가 사랑과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증오와 살육을 저지르고 있으니 지독하게 역설적이지요 모순이다.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폭력과 전쟁에 맞서 비폭력 평화 사상과 이론을 추구하고 실현해온 사상가와 운동가들도 대부분 종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폭력운동의 상징이랄 수 있는 톨스토이(Lev N. Tolstoy)와 간디(Mahatma Gandhi) 그리고 킹(Martin Luther King)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함석헌을 꼽을 수 있다.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무저항’을 실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신을 믿고 성서를 읽으며 비폭력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가 특히 큰 깨달음을 얻은 대목은 산상설교라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39-40절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가복음 6장 29절도 이와 비슷하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톨스토이에 앞서 퀘이커 교도들(Quakers)도 위와 같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권력의 악행에 대한 무저항’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폭력과 칼이라는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악에 대한 무저항, 온유, 온건, 평화 애호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로지 평화와 조화와 사랑의 모범을 보여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고 했다.¹¹⁾

간디는 힌두교도로서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비폭력저항 이론을 다듬고 실천에 옮겼다. 톨스토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기독교 경전을 공부하며 가르침을 받은 기독교인이란, 간디는 힌두사원에 다니지 않으면서 힌두교 경전을 즐겨 읽은 힌두교도

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237쪽에서 재인용.

11)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저, 박홍규 역,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파주: 들녘, 2016), 37-57쪽; 이재봉, 「촛불시위를 통해 본 비폭력 저항의 이론과 실천」,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87호(한국동북아학회, 2018년 6월), 138쪽에서 재인용.

였다. 간디가 영국에서 법을 공부할 때, 스무 살이 되도록 읽지 못해 부끄러웠다고 고백하며 읽었던 힌두교 경전이 『바가바드 기타』다. ‘신의 노래 (the song of God)’ 또는 ‘하느님의 노래 (the song of Heaven)’라는 뜻을 지닌 이 경전은 간디의 ‘정신적 참고서 (spiritual reference book)’ 또는 ‘일상 지침 (daily guide)’이었다. 그가 1,000 번 이상 읽었으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간디의 사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저작일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 간디, 킹에게 영향을 준 쏘로우 (Henry David Thoreau) 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저작이며, ‘한국의 간디’로 불린 기독교인 함석헌도 번역했던 『바가바드 기타』의 가장 큰 가르침이 바로 비폭력이다.¹²⁾

2. 남한 종교계를 향한 북한 종교기관의 호소

위와 같이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악화하는 상황에서 2019년 11월 북한 종교단체들이 남한 종교계를 향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가 11월 10일 “파사현정, 권선징악의 실천행에 나서자!”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격문을 발표했다.

“남녘의 불자들이여! 부처님 가르치신 중도는 침묵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실을 바로 보고 옳은 것을 위해 과감한 실천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제자의 모습이고 역할이다. 파사현정, 권선징악의 실천행에 나서자! 정의에 손을 들어주는 시국선언으로 초불민심에 힘을 더해주자! 보수의 부활은 암흑이고 적폐 (적폐)의 잔존은 고통이다. 초불 (초탈)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권력찬탈에 미쳐날뛰는 악의 본당 〈자한당〉을 단호히 징벌하자! 보수와 야합하여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검찰을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자! 온갖 괴담으로 적폐 청산의 민의에 전면 도전하는 보수언론과 매문가들을 발설지옥에 처넣자! 종교인의 탈을 쓰고 보수패당과 야합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을 신성한 교단에서 단호히 축출하자! 불교를 모독하고 온갖 악행으로 종교를 더럽히는 전광훈을 지옥으로 보내자! 남녘의 전체 불자들은 보수적폐 청산의 초불을 자등으로, 법등으로 높이 들고 공정한 사회, 현세의 불국토를 일떠세우기 위한 현실 참여행에 적극 떨

12) Louis Fisher, *The Life of Mahatma Gandhi* (New York: Harper & Row, 1983), pp. 29-37; Robert L. Holmes, ed., *Nonviolence in Theory and Practice*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1990), p. 8; Doris Hunter, “On the *Bhagavad-Gita*” in Robert L. Holmes, ed., *Nonviolence in Theory and Practice*, pp. 16-19; 이재봉, 「초탈시위를 통해 본 비폭력 저항의 이론과 실천」,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87호(한국동북아학회, 2018년 6월), 139쪽에서 재인용.

쳐나서야 한다. 정의를 웨치는 (외치는) 민의에 화답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보수 적폐 청산의 범종을 높이 울리자! 새 정치, 새 사회, 새 생활에 대한 남녘겨레의 지향과 열망이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정의의 광장에 용약 나서자! 파사현정, 권선징악의 과감한 실천으로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통일되고 평화번영하는 현세의 지상정토를 세우기 위하여 용맹정진하자!”¹³⁾

11월 14일엔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가 나섰다. “지금 ‘유신’독재의 후예들, 사탄의 무리들이 정의와 신앙에 도전하여 최후 발악하고 있다”며 “보수세력의 추악한 정치시녀로, 적폐의 파수군으로 전락된 사이비 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과 ‘성령’을 더럽히고 있으며 천벌을 받아 마땅한 적폐세력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루명을 쓴 죄인인 양 흑백을 뒤집으며 후안무치하게도 초불민심을 ‘심판’하겠다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반보수, 적폐청산은 초불민심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책무이며 주님의 소명이다. 성직자이건,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반보수, 적폐청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면서,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소란케 하는 사이비종교 집단을 신성한 교단에서 척결하자”고 호소했다.

11월 15일엔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가 격문을 발표했다. “‘만국병마’를 등에 업고 저들의 권력탈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도탄에 빠진 민생은 아랑곳없이 더 많은 혈세를 미국 상전에게 섬겨 바치려고 갖은 추태를 부리다 못해 섬나라 쪽발이들의 오만방자한 망동을 비호 두둔해 나서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자한당’을 비롯한 적폐무리들”이라며, “진정으로 광제창생, 제세안민을 바라는 천도교인이라면 오늘의 엄중한 시국 앞에 시지불견할 것이 아니라 반파쇼 민주화와 사회적 정의를 위한 운동에 앞장서온 선배동덕들처럼 불의와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기 위한 정의로운 반보수, 적폐청산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안중에도 없이 물욕지심에만 미쳐 날뛰는 사대매국노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자”면서, “적폐청산에 전면도전하는 검찰과 보수언론을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자”고 호소했다.¹⁴⁾

이처럼 북한 종교기관들은 남한 사회를 어지럽히며 반복적 언행을 일삼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개신교를 겨냥해 “종교인의 탈을 쓰고 보수패당과 야합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을 신성한 교단에서 단호히 축출하자”거나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소란케

13) 〈북 조불련, 남 불자들에 격문... ‘제2의 촛불항쟁에 뛰어들자’〉, 《통일뉴스》, 2019.11.1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10>.

14) 〈북 종교협회들, ‘반보수적폐청산 투쟁’ 촉구 격문 발표〉, 《통일뉴스》, 2019.11.17.,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76>.

하는 사이비종교집단을 신성한 교단에서 척결하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섬나라 쪽발이들의 오만방자한 망동을 비호 두둔해 나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보수와 야합하여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검찰” 등 적폐청산에 전면 도전하는 세력을 징벌해달라고 촉구했다.

3. 평화 정착을 위한 남한 종교의 역할

한국의 종교는 오래 전부터 민족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불교는 조선시대에 탄압을 받으면서도 의병운동을 주도했다. 천도교는 조선 말기 봉건 잔재에서 벗어나는 민족운동을 이끌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근대화운동에 앞장섰다.¹⁵⁾

해방 이후 냉전시대엔 일부 종교인 또는 종교학자들이 해외에서 제한적이거나 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해 힘썼다. 1990년대 초 세계적 냉전종식과 아울러 남북 정부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이 널리 알려지자 남한 종교계의 역할이 커졌다.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비롯한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데 종교가 앞장섰다. 북한에 대한 선교 또는 전도를 염두에 둔 활동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 정부 차원에서나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나 교류와 협력이 전면 중단되었다. 종교계가 앞장서온 인도적 대북지원조차 중단된 것이다.

이런 터에, 앞에 소개했듯 2019년 11월 북한 종교단체들이 남한 종교계를 향해 ‘정치적’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불교, 천주교, 천도교 순이었다. 호소문에 명시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남한의 극우 개신교계가 반복적 언행을 일삼는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개신교는 빠뜨린 것 같다.

남한 종교계가 이러한 내정간섭 같은 정치적 공세에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호응하면 ‘북한의 사주’라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극우 개신교의 반평화적 언행에 맞서 꼭 막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종교의 역할이나 과제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2019년 현재 한반도 안팎의 불안한 정세 가운데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에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과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인데, 이에 관한 남한 종교의 역할을 제안한다.

15) 임현진, 「천도교의 통일운동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 2019 한국평화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2019. 9.6.,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 발표 논문.

1) 평화 만들기를 위한 천주교의 역할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듯, “중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한국전쟁부터 끝내면서 한반도평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1950년 시작되고 1953년 멈춘 전쟁을 미국과 북한의 갈등으로 완전하게 종식하지 못하고 있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미국-중국, 중국-남한, 남한-북한 사이의 전쟁은 끝났지만, 북한-미국 사이의 전쟁만 미국의 거부로 끝나지 않고 있다.¹⁶⁾

북한과 미국이 1948년부터 시작된 적대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고 2018년 합의했지만, 70여년의 적대관계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018년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은 남한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국회)에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시정연설을 통해 12월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 지도자를 비난했다.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또는 ‘촉진자’역할을 조롱하고 거부한 것이다.¹⁷⁾

사실 남한당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한이 북한 편으로 치우치는 듯하면 남한 보수세력과 미국으로부터 친북적이라거나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비판을 듣고, 반대로 남한이 미국 편으로 기울는 듯하면 남한 진보세력과 북한으로부터 외세 의존적이라거나 ‘우리민족’을 중시하라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고 노골적으로 남한의 ‘중재자’ 역할을 거부하는 마당에선 다른 중재자가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대화와 협상이 막히면 탁월한 중재자가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책임자는 교황이라 생각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콜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막후 역할을 하는 등 국제적 갈등 해소와 화해 진전을 위해

16) 문재인,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2017~2018) 하권(서울: 대통령비서실, 2018), 423-426쪽.

17) <김정은, ‘올해 말까지 인내심 갖고 美 용단 기다려 볼 것’>, 《통일뉴스》, 2019.04.13.,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417>.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이런 전력이 있는 그를 남한 천주교의 최고지도자 김희중 대주교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로 만나 남북 화해의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김 위원장이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나는 갈 수 있다”는 화답을 받았다. 교황의 한반도 사랑은 각별하다고 한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순례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2019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이 열릴 때는 영상 메시지를 판문점 행사장에 보내 “인내심을 갖고 지속해서 화합과 조화를 추구한다면 분단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기도 했다.¹⁸⁾

이렇듯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으며 한반도평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황에게 1950년 시작되고 1953년 멈춘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도록 하는 게 절실하다. 남한의 대주교와 대통령의 요청에 이어 모든 천주교 지도자와 교도들이 청원운동을 벌이면 교황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2)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천도교의 역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를 푸는 데 천주교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 사이의 단절된 대화를 잇는 데는 천도교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종류의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대화조차 단절된 상황에서 남한 천도교는 북한 천도교와 물밑 접촉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천도교는 북한에서 종교기관이자 정치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천도교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북한에서 민족종교로 받아들여지면서 신자가 약 15,000명으로 가장 많다. 남한에서는 100만명 안팎의 신도를 갖고도 이른바 ‘소수종교’에 속하지만, 북한에서는 ‘최대종교’인 것이다. 1946년 천도교도들이 조직한 <천도교청우당>이라는 정당까지 있다. 2019년 현재 천도교도들 가운데 남한의 국회의원과 같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20여명으로 전체 680여명의 3%를 차지한다. 다른 종교에 비해 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한 배경이다.

북한에서 천도교의 위세나 영향력이 큰 이유는 무엇보다 김일성 집안과 천도교 지

18)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 땅을 밟는 그날까지!>, 《가톨릭평화신문》, 2019.12.25., http://www.cpbc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69115&path=201912;
<김희중 대주교 “북미관계 급진전 시 교황 방북에도 긍정 신호”>, 《연합뉴스》, 2019.02.24.,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4002100109?input=1179m>.

도자들의 개인적 인연이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과 항일독립운동 동지로서 김일성의 중학교 스승이 천도교인이었다. 김일성이 1926년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한 군사정치학교인 만주 화성의숙에 들어간 것은 그해 사망한 아버지의 유언과 아버지 동지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는데, 화성의숙 교장이 천도교인 최동오였다.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최동오는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회의에서 다시 만났고, 1950년 한국전쟁 중 서울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들은 김규식, 안재홍, 조소앙 등과 함께 최동오를 북한으로 모셔갔다. 소위 ‘남북’한 것이다. 그리고 최동오의 아들 최덕신과 류미영 부부가 1986년 북한으로 망명했다. 최덕신은 남한에서 육군사관학교장을 지내다, 한국전쟁 중 사단장으로 북한 인민군과 싸웠고, 휴전회담 때는 한국군대표를 맡았으며, 군단장을 지내다 중장으로 예편했다. 그 뒤로는 베트남대사, 외무부장관, 서독주재 대사로 일하다 1967년 천도교 교령 자리에 올라 한국종교협의회회장을 맡았다. 이런 사람이 1976년 미국에 건너가 살다 1986년부터 평양에 정착한 것이다.¹⁹⁾

나아가 1997년 남한의 오익제 천도교 교령이 월북하고, 2019년 7월엔 최덕신과 류미영 부부의 아들 최인국 동학민족통일회의 대외협력위원장이 북한으로 올라갔다. 최인국은 월북을 앞두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70년 이상 살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통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분위기가 아니냐. 북한의 청우당을 교두보 삼아 종교적 차원의 통일운동을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송범두 남한 천도교 교령은 “북한에서 청우당이 제대로 앞장선다고 하면 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인국이 북한에서 “통일의 앞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조심스레 기대감을 드러냈다.²⁰⁾

이와 같이 북한 천도교는 종교기관이자 정치단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한 천도교는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에서 활발하게 앞장서온 종단이다. 동학민족통일회의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낸 남한 천도교도 최인국이 북한 청우당에 몸담게 되었으니, 이를 통해 천도교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9) 이재봉, 『두 분으로 보는 북한』 (서울: 평화세상, 2008), 369-390쪽.

20) <천도교 “최인국씨 월북 유감…北청우당 위원장 활동 예상”>, 《연합뉴스》, 2019.07.09.,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9105851005?input=1179m>:

참고문헌

- 2018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018 평양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2018.9.20.
-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관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2018.9.19.
-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저, 박홍규 역,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과주: 들녘, 2016.
- 문재인,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2017~2018) 하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2018.
- 문재인,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2018~2019) 상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2019.
- 이재봉, 「글렌 D. 페이지의 비폭력 정치론」, 안청시 편, 『비살생정치학과 지구평화운동』, 서울: 집문당, 2004.
- 이재봉,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와 남한의 중립 외교」,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70호 (한국동북아학회, 2014).
- 이재봉, 「미중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84호 (한국동북아학회, 2017).
- 이재봉, 「종교와 평화: 원불교의 비폭력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8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 이재봉, 「한일협정과 미국의 압력」,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54호 (한국동북아학회, 2010).
- 이재봉, 『두 분으로 보는 북한』, 서울: 평화세상, 2008.
- 이재봉, 「촛불시위를 통해 본 비폭력 저항의 이론과 실천」,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87호, (한국동북아학회, 2018).
- 이케다 다이사쿠·요한 갈통 저, 손대준 역, 『평화를 위한 선택』, 서울: 신영미디어, 1997.
- 임현진, 「천도교의 통일운동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 2019 한국평화종교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9.9.6.,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 발표 논문.
- 한광수, 『미중 패권전쟁은 없다』, 서울: 한겨레출판, 2019.
-
- <가톨릭평화신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 땅을 밟는 그날까지!”, 2019.12.25.
- <연합뉴스>, “김희중 대주교 "북미관계 급진전 시 교황 방북에도 긍정 신호”, 2019.02.24.
- <연합뉴스>, “천도교 ‘최민국씨 월북 유감…北청우당 위원장 활동 예상’”, 2019.07.09.
- <연합뉴스>, “폐기 문턱까지 갔던 지소미아…우여곡절 끝에 '기사희생'”, 2019.11.22.
- <통일뉴스>, “화성-15형 시험발사 대성공... 국가핵무력건설 완수”, 2017.11.30.
- <통일뉴스>, “김정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새 전략노선 천명”, 2018.4.21.

- 〈통일뉴스〉, “김정은, ‘올해 말까지 인내심갖고 美 용단 기다려 볼 것’”, 2019.04.13.
〈통일뉴스〉, “북 조블런, 남 불자들에 격문... ‘제2의 촛불항쟁에 뛰어들자’”, 2019.11.12.
〈통일뉴스〉, “북 종교협회들, ‘반보수적폐청산 투쟁’ 촉구 격문 발표”, 2019.11.17.
〈한국일보〉, “미 정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특히 강조”, 2015.12.29.

Fisher, Louis, *The Life of Mahatma Gandhi*, New York: Harper & Row, 1983.
Holmes, Robert L. ed., *Nonviolence in Theory and Practice*,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1990.
Hunter, Doris, “On the *Bhagavad-Gita*” in Robert L. Holmes, ed., *Nonviolence in Theory and Practice*,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1990.

The New York Times, “Trump Orders Pentagon to Consider Reducing U.S. Forces in South Korea,” May 3, 2018.
USA Today, “Trump's Big 10 foreign policy pledges — will he keep them?,” November 17, 2016.

원고접수일: 2019년 12월 2일 심사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6일

연구자소개: 이재봉

① 전공: 정치외교학, 평화학 / 소속과 직위: 원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② 관심영역: 평화와 통일

③ 주요논저: 『이재봉의 법정증언』, 『문학과 예술 속의 반미』, 『평화의 길, 통일의 꿈』

④ E-mail: pbpm@hanmail.net

Abstract

The Role of Religions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the
Era of Great Transi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Lee, Jaebong

Wonkwang University

Inter-Korean summit and North Korean-American summit in 2018 brought about great chang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breakdown of the second North Korean-American summit in 2019, however, the peninsula has fallen into instability and crisis. The most urgent task for peace on the peninsula is ending the Korean War which began in 1950 and making a peace treaty. The role of religions in South Korea should include helping to mediate to end the Korean War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helping to facilitate to resume dialogu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ey words: great transition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ending the Korean War, peace making, the role of religions. mediator, facilitator